‘100일 논의’ 불씨 … ‘3차 전쟁’ 가나

여야 미디어법 ‘논의 기구’ 동상이몽
국회 정상화 불구 상임위 곳곳 충돌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발표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은 물론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상당한 후폭풍을 겪었다.

특히,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 여야가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3차 입법전쟁의 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오전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고흥길 위원장의 사회권 인정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또다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정회됐다가 고 위원장의 유감 표시로 일단락됐다.

민주당 측은 지난달 25일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 관련법을 ‘날치기 상정’한 것의 책임을 물어 최소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회의진행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기에 미디어 관련 쟁점법안 중 하나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발의안만 단독 상정돼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 주변을 둘러싸며 고흥길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원천봉쇄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몸싸움이 빚어졌다.

특히, 충돌 과정에서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멱살잡이까지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는 언론 관련법을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언론악법 시한부 표결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언론 관련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문방위 산하의 논의 기구가 법안 내용도 수정할 수 있도록 강제 역할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의견을 구하는 자문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추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관련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도 파행됐다.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비율 상한선과 사모펀드 출자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여야정책협의와 이어진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 ‘경제 관련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해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안 내용 가운데 ‘수정할 것은 수정한다’는 모호한 문구가 또다시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이다.

이처럼 여야간 쟁점법안 합의로 2차 입법전쟁은 일단락됐지만, 서로간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채 합의안의 구체적인 적용을 놓고는 벌써부터 충돌하고 있어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 기한인 6월 임시국회에서의 ‘3차 입법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다시 난장판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종걸(오른쪽)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고흥길(왼쪽) 문방위원장의 기습상정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하자,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 등이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미디어법 후폭풍

민주당, 지도부 자진 사퇴 촉구
한나라, 박근혜 ‘공’ 싸고 신경전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타협 이후 양당 모두 후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사실상 패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주당에는 지도부 인책론이 제기되는 등 폭풍의 강도가 거센 편이다.

민주당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 소속의 이종걸 의원은 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야당 입장으로 볼 때에는 백기를 들라는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전날 지도부의 합의를 ‘백기 항복’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또 당내 다수여론이 강경대응이었음을 전한 뒤,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현실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통감하는지 그에 대해 아마 스스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느냐”며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연대 대변인인 우원식 의원도 이날 “충분히 예견되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민주당 지도부의 안이한 태도는 매우 아쉽다”고 거들었다.

구 민주당 출신인 김성순 ‘민주시니어’ 모임 간사도 이날 “민주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미디어법은 타협할 성질이 아니었다”며 “애초부터 법안의 경중을 가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법안 숫자를 최소화한 뒤, 다른 것은 빨리 타협해주고 마지노선을 사수해야 했는데 ‘선택과 집중’에 실패했다”고 전략 부재를 비판했다.

특히,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은 미디어관련법 여야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지도부의 위상에 치명상을 입혔다.

이에 앞서 여야 합의 직후 소집된 2일 밤 민주당 의총에서 의원들의 발언도 지도부 성토 일색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선 ‘극적 합의’에 큰 힘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공’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친이계인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평가”라며 “여야 합의를 해내는 데 일등 공신은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반면, 원희룡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 “박 전 대표의 말은 어떻게 보면 만점 짜리 정답이었다”며 극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이날 “잘하신 것 아니냐”며 박 전 대표의 역할을 긍정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김형오는 위선자”

민주, 내분 일자 한나라에 화살

2월 입법전쟁에서 판정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3일 야당의 양보를 촉구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지도부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공격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더 큰 비판도 일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압박했는데 그래도 의장이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게 실수였던 것 같다”며 김 의장을 은근히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것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뒤집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본회의 사회를 보는 의장을 보면서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써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김 의장을 비난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의장이 자신의 중재를 뒤집은 한나라당에 굴복했다”며 “의장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직권상정 요구를 바로 수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표를 향해 “자기의 원칙 없이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민주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아마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뒷받침하는 역할은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간사인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표를 겨냥, “참으로 박 전 대표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양보할 만큼 했다는데 뭘 그리 양보했나”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표의 국민적 공감대는 친이와 친박의 공감대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위선적인 껍데기가 벗겨지고, 박 전 대표의 눈에는 국민이 친박과 친이만 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역시 그 당의 그 전 대표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대통령 北과 대화 나서라”

박지원 의원 촉구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3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방문하는 지금이 적기다”며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손을 잡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이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한반도 위기를 불렀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북한을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과거 소련도 중국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북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서해안 무력 충돌도, 미사일 발사도 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저리 총액한도대출 풀어라”

강운태 의원 주장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은 3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가동 중단은 광주 경제의 파탄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기아차는 광주 GRDP(지역내총생산)의 28%, 고용의 3%(협력업체 포함), 하청업체 350개를 거느린 광주의 대표기업으로 광주공장이 멈춰서면 지역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밝히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부분적이라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아차는 광주공장 가동 중단으로 단기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수출·내수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350개 협력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권에서 총액한도대출의 저리(1.25%) 자금을 신속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16일 건설사·조선사 등 구조조정에 따른 광주·전남 경제 환경의 악화를 우려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광주본부와 목포본부에 150억원, 1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경찰
개강 3월 2일(종합 및 문제풀이)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수강료 교재 25% D/C
1년과정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수강료 50% D/C 교재 25% D/C
순경공채
•남-1차 : 966명 2차 : 214명
•여-1차 : 40명 2차 : 47명
•101단-1차 : 120명 2차 : 120명
특 채
•전의경 특채 240명
•경찰 행정학과 특채 100명
•경찰 특공대 특채 38명
※종합 1개월 :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 13만원 ·단과 : 9만원
경찰 전문 메가경찰학원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www.gmega.co.kr
☎ 226-5050

= 정확한 합격 예약!! 無等과 만나세요. =
7·9급 공무원 對備 전문
9급 적중문제풀이 4주 완성
행교세관감법검마철교보보간복소기 정행무세사원찰약공정호건호지방술
(영어)10등급 없는 기능직 미일반상식 미행 국 사 박한법 교수
=송 지방직(시험5월23일)=
• 서울903,부산251,대구100,인천383,광주68
• 대전105,울산 66,경기630,강원160,충북162
• 충남348,전북 206,전남238,경북 216,경남 316
개강 3월 2일(주·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소방직 • 사상최다모집예정 • 단독반:이 경 호 교수팀
• 서울 372, 부산 82, 대구 42, 인천 277, 광주 115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3
• 충남 168, 전북 118, 전남 190, 경북 128, 경남 110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 전문자격증 준비!! ★★★
공인중개사 10월 25일 시험
여성 최고의 유망 전문직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강" 전원 서울에서 출강!
직장인 수강료 환급 국비지원 선착순
大 개강 3월 2일 (첫진도 시작반)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건설면허
► 건설업 양도 양수
► 건설업 구조조정(분할 /합병)
► 신규취득 /기업진단

부성 M & A ☎02)773-5690~1